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탄소중립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류쩌하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조 영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한미정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2021년 수립된 탄소중립정책에 관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이들 변인관계에 있어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성인 응답자 3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탄소중립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이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보 활용(기능적 정책리터러시)이 더 적극적이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평가(비판적 정책리터러시)가 더 긍정적이다. 셋째,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전통적 정책리터러시), 관련 정책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기능적 정책리터러시), 탄소중립정책의 유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나타났다. 넷째, 정책리터러시의 세 가지 차원 중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평가(비판적 정책리터러시)가 긍정적일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참여의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 있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 lzhzl0329@hanyang.ac.kr, 제1저자

** yzhao716@gmail.com, 공동저자

*** mjhan909@hanyang.ac.kr, 교신저자

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책공중의 지지와 참여에 관여할 수 있는 변인들의 고찰을 통해 정책소통의 방향성을 파악했고 향후 이러한 요인들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소통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KEY WORDS 탄소중립정책 • 정책리터러시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지각된 정책효능감 •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폭염, 한파, 산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 경제적 손실, 정치 갈등 및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성과로써 탄소중립정책(carbon neutrality policy)은 매우 중요한 대응책으로 등장했고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외교부기후변화협상, 2020).

탄소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050 탄소중립 포털, 2022).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회의는 처음으로 탄소중립의 개념을 제시했고 그 이후 영국, EU, 중국, 한국,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관련한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환경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2021)을 제정해 개인, 가정, 학교 및 사업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 및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과 공중의 적극적인 정책참여(policy participation)는 공중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동의와 이해가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신호창·이두원·조성은, 2011). 따라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지지(policy support)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했다.

정책지지만 특정한 정책에 대한 공중의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일종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반응이다(금현섭·백승주, 2010).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호의적·비호의적인 느낌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Fishbein & Ajzen, 1975), 태도를 설명하고 개념화하는 다양한 이론(예: 계획된 행동이론, 합리적 행동이론, 인지-태도-행동 커뮤니케이션 모형 등)에 따르면, 사람들의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 인식, 신념, 지식정도 등 다양한 인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행동적 의도와 실질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중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태도인 정책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지적 요인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탄소중립 정책이해에 대한 자신감에 주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효능감 지각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피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각의 정도를 말하며(윤용석·윤자용, 2018), 위험인식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대응책에 대한 태도형성과 실질적인 대응행동 구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pence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대응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Kettle & Dow, 2016; Singh, Zwickle, Bruskotter, & Wilson, 2017).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기후변화교육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는 목적에 머물고 있다(정윤지·허종식, 2015; 한신·이달희, 2019). 정책소통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수용에 관련한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관련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인식은 어떤 특정한 잠재적 위협의 발생 가능성과 크기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송해룡·김원제, 2013),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개념적 정의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이미 명백하게 일어나는 현재의 시대 배경에서 위험인식을 넘어 공중들이 지각하는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관련 대응책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요구된다.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정책효능감(perceived policy efficacy)에 주목했다. 정책효능감은 특정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탄소중립정책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산업적·기술적 요인, 탄소저감 실천을 위한 정확한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내용을 포함한 소통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강귀영·윤영민(2021)에 따르면 공중의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에 있어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효과적인 정책 실행의 필수적인 선행요건이라는 것이다. 지각된 정책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효능감은 정책인지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이재완, 2019; 주현정·이연택, 2015), 정책효능감이 기후변화 정책순응을 통해 정책지지로 이어지는 매개적 역할을 보이기도 했다(김수진·김영옥, 2019). 이와 같이 정책효능감은 정책지지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정책의 복잡성과 최신성을 고려하여 지각된 정책효능감을 선행요인으로 적용해 정책지지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의 매개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행요인으로 많이 다루어졌을 뿐 아니라(오은비·이경아·이연택, 2016; 이연택·김태형·오은비, 2019) 주민참여, 정책정보 제공, 정책PR 등 다양한 선행요인들과 정책지지 간의 구조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주경·김준홍·한문성·강제상, 2020; 김현준·이일용, 2013; 이연택·김형준, 2014). 이러한 기존 연구와 구별되게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의 인식변인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들 기존 연구는 모두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측정하는 전통적 정책리터러시(traditional policy literacy)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정책리터러시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한계성이 존재한다(고혜영·김주경, 2020).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정보 이해능력에 근거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뿐 아니라 정책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개념화한 기능적 정책리터러시(functional policy literacy), 정책정보에 대한 평가능력을 근거로 개념화된 비판적 정책리터러시(critical policy literacy) 등 세 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이다(정광호, 2008). 따라서 정책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은 전통적 차원 중심에서 기능적 및 비판적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과 같이 폭넓은 정책지지와 행동적 참여가 핵심적인 새로운 정책소통 상황에서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의 매개효과 고찰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탄소중립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검증을 통해 향후 탄소중립정책의 효과적인 전개와 공중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책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하는 변인들을 적용하여 기존 정책PR 연구의 틀을 확장하고자 했다.

2. 선행연구 고찰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정책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제조업을 비롯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으로 지구는 매우 심각한 이상기후를 겪고 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의하면, 2010년대(2010~2017)의 연평균 기온이 13° C로 매 10년마다 0.3° C씩 상승하는 등 지난 30년간 꾸준히 온난화 현상을 보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8년 개최된 IPCC 총회를 통해 <지구온난화 1.5° C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C 이상 상승 시 한파, 폭염, 산불, 태풍, 홍수 등 대규모의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 식량 부족, 난민, 질병 등 인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폭을 1.5° C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2010년의 45% 이상으로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뉴질랜드(2019년), EU, 중국, 한국, 일본(2020년), 미국, 러시아, 인도(2021년) 등 주요국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 관련 선언을 발표했고 그중의 대부분 국가는 탄소중립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2020년 8월)’을 필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2021년 12월)’ 등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한상운·정우현·마아랑, 2021).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노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상태(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3항, 2021)를 이루기 위해 정부는 국가차원뿐 아니라 산업차원, 일반 국민차원 등 전 방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지지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강조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공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탄소중립정책 실행에 효과적인 소통방향과 전략적 소통요인을 파악했다.

2) 탄소중립 정책지지의 영향요인 탐색

일반적으로 정책지지는 특정한 정책에 대한 공중의 평가를 통해 표출되는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태도(금현섭·백승주, 2010),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공중의 주관적 반응(윤종설·함중석, 2004), 특정 정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공중의 태도(차희원·여선하·박단아, 2018; Pickel & Pickel, 2006), 또는 정책에 대한 공중의 찬성과 수락(Clayton & Myers, 2015)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책PR 분야에서 정책지지는 정책홍보의 성과변인으로 주로 다루어졌고 정책만족(policy satisfaction), 정책수용(policy acceptance),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 정책태도(policy attitude),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 정책동조(policy confirmity)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Hetherington & Globetti, 2002). 하지만 정책순응과 같은 정책공중의 표면적인 행위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정책지지가 정책공중의 태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더욱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강귀영·운영민, 2021; 오은비·이경아·이연택, 2016). 또한 정책태도, 정책수용, 정책순응 등의 개념과 달리 정책지지는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라는 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김재근·권기현, 2007; 윤종설·함중석, 200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지의 개념을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공중들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지지는 탄소중립정책의 목표나 필요성, 추진방향성, 추진과제 등 전반적인 정책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해 공중들이 표명하는 동의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지각된 정책효능감, 정책리터러시 등을 탐색하고자 했다.

(1)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기후변화의 다양한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중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나 불만족과 함께 심각성 지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피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각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윤용석·윤지웅, 2018).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 국민환경의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45.8%가 환경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고, 83.7%가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났거나 미래 10년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92.4%가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호철·이홍림·김현노·안소은, 2021).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심각성을 보인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관련 대응책에 대한 인지율과 동의율(지지율)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그중의 89%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79.9%가 정책 추진방향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호철 외, 2021).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대응정책에 대한 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김영욱·김혜정·한빛나라·함승영(2020)은 비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자원의 낭용, 에너지안보의 취약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에너지 다소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축소를 둘러싼 사회갈등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중의 심각성 인식을 조사하여 관련 대응정책지지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간의 연관성을 높게 인식했고 현재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에너지 관련 정책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의 비합리적 소비,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축소를 둘러싼 사회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석탄·화력발전축소,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관련 대응책지지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관련 대응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접근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심각성 지각은 개념적 정의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일종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Spence et al., 2012). 케틀과 다우(Kettle & Dow, 2016)는 미국 메릴랜드(Maryland), 알래스카(Alaska), 플로리다(Florida)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련한 기획자, 기술전문가, 국가기관 및 NGO단체 주요부처의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및 신뢰 요인이 대응정책지지(기후변화 대응정책 개발 및 자원 할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은 대응정책 개발과 자원 할당 등 두 가지 유형의 대응정책지지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과 해안관리 등 전략적 대응에 재정적, 인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 외(Singh et al., 2017)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시간적·공간적·사회적·발생 확률적), 위험인식,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이 관련 적응정책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 변인을 적용하여 관련 대응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심각성 지각의 본질이 같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피해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심각성 지각이 공중의 탄소중립 정책지지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탄소중립 정책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각된 정책효능감

지금까지 정책PR 분야의 연구에서 정책효능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책효능감의 개념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강귀영·윤영민, 2021; 박경순, 2014; 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이러한 이유로 지각된 정책효능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 또는 연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정책효능감을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Craig, Niemi & Silver, 1990), 이는 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기본적 과정으로 정치과정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정치효능감은

캠벨, 거린, 그리고 밀러(Campbell, Gurin & Miller, 1954)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는데, 크게 내적과 외적 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과정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고 외적 정치효능감은 “시민의 요구에 정부 당국이나 기관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김평·김서용, 2017: p3, 재인용; Lassen & Serritzlew, 2011).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on & Klandermans, 2001).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정책효능감 또한 내적 및 외적 등 두 가지의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적 차원의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특정한 정책과정 및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외적 차원의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정부나 정책체제 또는 정책결정자가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과 같이 개인차원의 인식변인과 맥을 같이하는 내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각된 정책효능감을 다루었다. 특히 이제 막 정책으로 자리를 잡은 탄소중립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정책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개인적 차원의 신념이나 자신감이 탄소중립정책 전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는 정책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변인인 정책참여 변인도 개인적 차원의 참여의도나 의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행에 관련한 외부적 반응이나 영향력을 다루는 외적 효능감보다는 지각된 내적 효능감이 정책지지의 선행변인으로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모형에 투입되었다.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현정·이연택(2015)은 지역컨벤션산업 정책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이 지각하는 정책효능감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수진·김영옥(2019)은 문화적 편향과 기후변화 정책순응,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위험인식, 감정,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했는데, 정책효능감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책순응을 통해 정책지지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재완(2019)은 정책인지도와 정책효능감을 중심으로 일반 공중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인지도와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태도 간의 정적인 관계가 응답자들의 정책효능감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귀영·윤영민(2021)은 지문사전등록제에 대한 정책지지와 정보 확산 행동에 있어서 지각된 정책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했는데,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지지를 통해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확산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탄소중립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2.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탄소중립 정책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책리터러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및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정책리터러시는 기존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책 분야의 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원래 리터러시는 주로 문자에 대한 해독 능력을 지칭하며(Heath, 1986), 최근 그 의미가 확장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책리터러시는 정책PR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책리터러시를 처음 개념화한 것은 정치학 연구인데, 어떤 정치문제에 대해 일반 공중이 보여주는 정치에 대한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이해와는 구별되게 ‘전문적인 정치 지식’이나 ‘정치적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Carol & Lo, 1997). 이후 정책리터러시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졌고 정치뿐 아니라 정책 분야의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책리터러시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인 정광호(2008)에 따르면 정책리터러시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협의의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의 과정과 구성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광의의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의 과정과 구성내용이 개인,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 등에서 가지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정보 이해에 근거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정책정보 활용에 기반한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그리고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등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활용되었다(정광호, 2008).

공중의 입장에서 정책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또한 세 가지의 차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윤영석·윤지웅, 2018; 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임도빈·정현정·강은영, 2012; 정광호, 2008; Wolbring, Leopatra & Yumakulov, 2012). 먼저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및 공론조사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중참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중들이 전문가들과 함

계 정책토론에 동참하여 정책숙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중들의 적절한 수준의 정책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정책리터러시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공중참여를 저해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전통적 차원). 다음으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통계자료나 공공기록, 그리고 정부 공식사이트에 대한 활용능력은 정책리터러시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기능적 차원). 마지막으로 정책 청문회와 같은 의견수렴과정에서 공중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정책리터러시가 높은 공중들은 정책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의사전달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비판적 차원).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는 공중의 정책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대한 인지적 수준 또는 이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는 공중들이 탄소중립정책의 목표, 의미, 추진방향, 세부적인 추진과제 등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수준 및 이해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정보에 대한 활용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책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와 관련된다. 탄소중립의 경우 기능적 정책리터러시는 탄소저감을 위한 개인의 생활쓰레기 관련 탄소배출량 파악이라든지, 일회용품 처리 등의 일상적인 영역에 있어 탄소저감정책에 관련된 정보의 활용 수준이나 정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정보에 대한 평가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기후변화나 경제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든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제품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등의 정책시행으로 인한 변화나 영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대로 정책리터러시가 다차원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리터러시에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의미하는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를 주로 활용하여 정책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있다(고혜영·김주경, 2020). 프라이어와 마케도(Freire & Macedo, 2005)는 정책리터러시의 개념이 초기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해석, 평가 및 소통능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공중이 정책의 과정과 기본적인 구성내용을 이해하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 관련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책실행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

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중의 수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실행이 이루어지려면 공중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일상생활에서 정책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기능적 정책리터러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사고와 평가(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등이 모두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위주로 다루어진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정책정보에 대한 활용과 영향력 평가 등을 포함한 세 차원의 정책리터러시를 살펴보았다.

정책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책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인구사회통계학적 요인(정광호, 2008; 최연택·박상인, 2011), 정책PR 또는 정책홍보 요인(이연택·김태형·오은비, 2019; 이연택·이경아·오은비, 2016), 조직-공중관계성 요인(강형미·이유나, 2018; 오은비·이경아·이연택, 2016) 등 정책리터러시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 정책리터러시를 다룬 윤영석·윤지용(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주관적 이해수준과 심각성 지각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리터러시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필요성 인식의 경우 개인적 차원의 대응필요성은 기후변화 정책리터러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응필요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변인과 개인수준의 대응필요성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탄소중립정책의 맥락에서도 정책리터러시와 같은 개인차원의 인식변인에 적용될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에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관련한 변인들과 정책리터러시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이영안·박미경·이홍재(2019)는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자녀수와 연령, 정책효능감, 정책PR 등이, 기능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정책효능감, 정책PR 등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력과 연령과 자녀수, 정책효능감 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의 정책리터러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정책리터러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책리터러시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확인된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정책효능감 변인을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책리터러시와의 관계에 적용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3.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탄소중립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탄소중립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오은비·이경아·이연택(2016)은 해외안전여행정책을 대상으로 정책PR, 공중관계성,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했다. 분석결과,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는 관계구조 간 변인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써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택·김태형·오은비(201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역축제정책의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 및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책리터러시가 정책지지에 가장 강력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책리터러시가 공중의 정책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동기(2021)는 공간정보정책에 관해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 차원의 정책리터러시가 정부신뢰 및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책리터러시 중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와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리터러시가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정책의 영향력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정책지지는 높아지는 반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책지지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혜영·김주경(2020)은 원자력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리터러시가 정부신뢰 및 원자력발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만이 정부신뢰와 정책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정책지지와의 관계

구조에 있어 정책리터러시의 세 차원을 모두 다루는 것이 정책리터러시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한 탐색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으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의 활용,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각 차원을 개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책리터러시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5. 탄소중립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는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의도 간의 관계 및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인인 정책참여의도는 개인이 어떤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이영안·이홍재, 2018) 행동적 의도의 내포하는 개념이다. 아이젠(Ajzen, 1991)에 의하면 행동의도는 특정한 행동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의향이나 의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참여의도를 향후 공중들이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 행사에 행동적으로 참여할 의지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의도 간의 관계를 고찰한 김주경·조광래·이홍재(2015)는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요인을 살펴보았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이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의도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친화정책 PR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이영안·이홍재(2018)의 연구에서도 정책에 대한 지지가 정책참여의도에 매우 강력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거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6. 탄소중립 정책지지는 정책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리터러시의 매개적 역할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준·이일용(2013)은 학교 자율화, 2009개정 교육과정, 교원 능력개발 평가 등 세 가지의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정보 제공과 정책지지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와 2009개정 교육과정 등 두 가지 정책의 경우 정책정보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리터러시에 의해 매개되는 반면, 교원 능력개발 평가정책의 경우 정책리터러

시의 매개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등 정책 내용에 따라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연택·김형준(2014)은 관광경찰제도에 대한 정책PR,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했는데 정책리터러시는 정책PR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연택·이경아·오은비(2016)의 경우도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있어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김주경 외(2020)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지에 관해서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는데, 주민참여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보였으나 정책리터러시를 통해서 정적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리터러시가 지역 주민참여와 정책지지 변인 간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매개변인으로써의 정책리터러시가 정책별로, 혹은 연구변인 관계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작용이나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정책 실행의 맥락에서 공중이 지각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가 각 차원별로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정책관련 정보제공, 정책PR 등 소통관련 변인과 정책지지의 관계에서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심각성 인식, 탄소중립 정책효능감 등 개인의 인식변인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서 정책리터러시의 역할을 검증했다.

한편 이러한 관계구조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식량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이해나 정책의 필요성과 영향력을 파악하는 정책리터러시 과정의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다양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정책정보를 파악하고자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탄소배출량과 같은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탄소중립정책의 필요성이나 목표, 추진방향과 과제를 이해하기 어려움과 같은 인식적 제약이 없다는 개인의 자신감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이 하나의 동인이 되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도, 탄소중립정책에서 제시된 정보의 활용과 정책실행이 수반하는 결과나 영향력 평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수준의 인지적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정책효능감 지각과 같은 변인이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출발지점이 되어 탄소중립정책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게 되고

이 과정이 정책에 대한 수용과 지지, 그리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참여의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탄소중립 정책리터러시의 매개적 역할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가설 7. 탄소중립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8. 탄소중립 정책리터러시(전통적·기능적·비판적)는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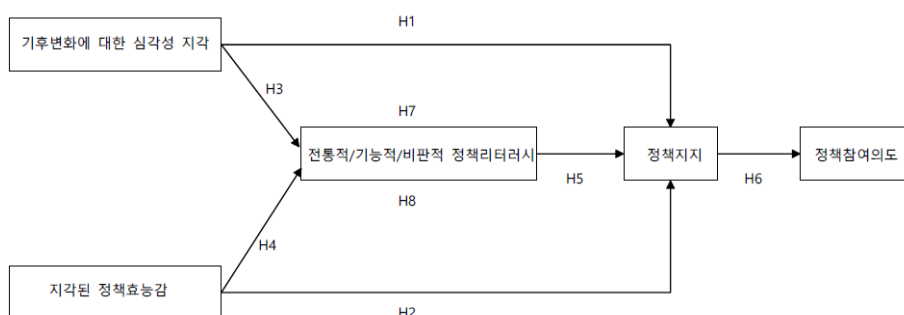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가설들의 검증을 위해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최종 총 320부의 응답 자료를 본 분석에 활용했다. 1차 설문조사는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배포된 250부의 설문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240부의 유효 응답을 수집했다. 설문문항 수와 표본 크기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계적인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차 설문조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했고 80부의 유효 응답을 수집했다. 한편 2021년 수립된 탄소중립 혹은 탄소중립정책이 일반 공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응답 전에 탄소중립정책의 개념, 중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목표, 효과 등의 기본적 정보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제시해 응답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읽어본 후 설문 응답을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35명(42.2%), 여성 185명(57.8%)으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을 살펴보면, 만20~29세(108명, 33.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만30~39세(90명, 28.1%), 만40~49세(72명, 22.5%), 만50~59세(38명, 11.9%), 만60세 이상(12명, 3.8%)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 234명(73.1%), 대학원 재학 및 이상 57명(17.8%), 고등학교 졸업 28명(8.8%), 중학교 졸업 및 이하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 78명(24.4%)과 200~300만원 미만 73명(2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00~200만원 미만 44명(13.8%), 300~400만원 미만 51명(15.9%), 400~500만원 미만 21명(6.6%), 500만원 이상 53명(16.6%)이었다.

2) 측정도구(측정변인 및 측정문항)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을 선행변인으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 유형의 정책리터러시를 매개변인으로,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했다.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모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경우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 7 = 매우 그렇다)를 통해 측정되었다(〈표 1〉 참조).

표 1. 측정변인 및 측정문항

측정변인	측정문항	참고문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폭우·산사태 등의 발생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옥 외(2020) 윤영석·윤지웅(2018)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 감소 및 멸종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 저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측정변인	측정문항	참고문헌
지각된 정책효능감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영안·박미경·이홍재(2019) Craig, Niemi & Silver(1990)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목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방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나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혜영·김주경(2020) 이동기(2021) 이연택·김태형·오은비(2019) 이영안·박미경·이홍재(2019)
	나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의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가능한 정책리터러시	나는 개인생활에서 탄소중립정책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혜영·김주경(2020) 이동기(2021) 이연택·김태형·오은비(2019) 이영안·박미경·이홍재(2019)
	나는 가정생활에서 탄소중립정책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나는 학교생활 또는 직장생활에서 탄소중립정책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나는 사회생활에서 탄소중립정책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나는 탄소중립정책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강귀영·윤영민(2021) 김주경 외(2020) 이영안·이홍재(2018)
	나는 탄소중립정책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탄소중립정책이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탄소중립정책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지지	나는 탄소중립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주경·조광래·이홍재(2015) 이영안·이홍재(2018)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목표를 지지한다.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방향을 지지한다.	
	나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지한다.	
정책참여의도	나는 향후 탄소중립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주경·조광래·이홍재(2015) 이영안·이홍재(2018)
	나는 향후 탄소중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도가 있다.	
	나는 향후 탄소중립정책에 가까이 참여할 것이다.	
	나는 향후 탄소중립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데이터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6.0과 SPSS Amos 26.0을 활용했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normality)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값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했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도(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는데, 타당도 확보에 있어 필요한 평균분산추출 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구성신뢰도 값(CR: construct reliability)을 산출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했다. 한편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확보된 측정변인의 기본 특성 및 이들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과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s analysis)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했다.

4. 연구결과

1) 정규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과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했고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이 3.0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10.0보다 작으면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Kline, 2005). 본 연구의 경우 측정문항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2는 가장 높은 왜도(-1.26)와 첨도(2.41)의 절댓값을 나타냈고 모두 클라인(Kline, 2005)이 제안한 기준치보다 작았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를 산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가 .60이상으로 나타나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alpha = .908$), 지각된 정책효능감($\alpha = .966$), 전통적 정책리터러시($\alpha = .957$), 기능적 정책리터러시($\alpha = .962$), 비판적 정책리터러시($\alpha = .916$), 정책지지($\alpha = .968$), 정책참여의도($\alpha = .949$)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표 2. 정규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

측정변인	측정문항	<i>M</i>	<i>SD</i>	<i>SE</i>	왜도	첨도	α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1	5.86	1.05	.06	-1.00	1.44	.908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2	5.97	1.03	.06	-1.26	2.41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3	5.71	1.12	.06	-.79	.57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4	5.32	1.21	.07	-.46	-.04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5	5.29	1.21	.08	-.39	-.31	
지각된 정책효능감	지각된 정책효능감1	5.09	1.40	.08	-.56	-.21	.966
	지각된 정책효능감2	5.07	1.42	.08	-.64	-.07	
	지각된 정책효능감3	5.02	1.45	.08	-.62	-.11	
	지각된 정책효능감4	5.01	1.46	.08	-.68	.08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1	4.77	1.43	.08	-.43	-.38	.957
	전통적 정책리터러시2	4.59	1.43	.08	-.32	-.40	
	전통적 정책리터러시3	4.49	1.42	.08	-.38	-.28	
	전통적 정책리터러시4	4.41	1.44	.08	-.27	-.41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기능적 정책리터러시1	3.98	1.41	.08	-.07	-.59	.962
	기능적 정책리터러시2	3.97	1.38	.08	-.08	-.48	
	기능적 정책리터러시3	3.93	1.41	.08	-.06	-.47	
	기능적 정책리터러시4	3.94	1.41	.08	-.09	-.39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비판적 정책리터러시1	5.33	1.16	.07	-.81	.80	.916
	비판적 정책리터러시2	5.02	1.28	.07	-.43	-.12	
	비판적 정책리터러시3	4.84	1.34	.07	-.42	-.18	
	비판적 정책리터러시4	5.22	1.32	.07	-.75	.36	
정책지지	정책지지1	5.83	1.14	.06	-1.04	1.32	.968
	정책지지2	5.67	1.14	.06	-.69	.05	
	정책지지3	5.57	1.22	.07	-.92	.89	
	정책지지4	5.53	1.18	.06	-.79	.68	
	정책지지5	5.62	1.20	.07	-.99	1.11	
정책참여의도	정책참여의도1	5.32	1.09	.06	-.45	.16	.949
	정책참여의도2	5.29	1.08	.06	-.41	.16	
	정책참여의도3	5.32	1.17	.07	-.59	.37	
	정책참여의도4	4.94	1.28	.07	-.28	-.11	

2) 타당도 검증결과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값/자유도(CMIN/*d.f.*), 근사평균제곱오차제곱근(RMSEA), 표준

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등을 통해 판단된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Kline, 2005; Marsh & Hocevar, 1985). 일반적으로 $CMIN/d.f.$ 의 값이 3.0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5.0이하이면 합리적인 적합도로 간주된다. NFI, IFI, TLI, CFI의 값이 .90이상으로 나타나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RMSEA의 값이 .05보다 작은 경우 좋은 적합도로, .08보다 작은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10보다 작은 경우 보통 적합도로, .10보다 큰 경우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경우 $CMIN/d.f. = 2.590$, $RMSEA = .071$, $NFI = .918$, $IFI = .948$, $TLI = .941$, $CFI = .948$ 의 값을 보여,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 검증은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50이상, 평균분산추출(AVE)이 .50이상, 구성신뢰도(CR)가 .70이상으로 나타나면, 수렴타당도가 확보되는데(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의 경우 요인 적재치가 .784 ~ .969로, AVE값이 .667 ~ .878로, CR값이 .909 ~ .969로 모두 해당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각 잠재변인의 AVE값이 해당 잠재변인과 다른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의 제곱보다 더 높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변인의 AVE값이 해당 변인과 다른 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3)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검증된 측정변인들의 기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했다(〈표 4〉 참조). 먼저 선행변인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M = 5.62$, $SD = .96$)과 지각된 정책효능감($M = 5.05$, $SD = 1.36$)은 모두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정책리터러시의 경우 비판적 정책리터러시($M = 5.10$, $SD = 1.14$)는 전통적 정책리터러시($M = 4.56$, $SD = 1.34$)와 기능적 정책리터러시($M = 3.96$, $SD = 1.33$)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정책지지($M = 5.64$, $SD = 1.11$)와 정책참여의도($M = 5.22$, $SD = 1.08$)는 역시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표 4〉 참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r = .301$,

$p < .001$, 전통적 정책리터러시($r = .261, p < .001$), 기능적 정책리터러시($r = .280, p < .001$), 비판적 정책리터러시($r = .501, p < .001$), 정책지지($r = .613, p < .001$), 정책참여의도($r = .650, p < .001$) 등의 변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전통적 정책리터러시($r = .574, p < .001$), 기능적 정책리터러시($r = .478, p < .001$), 비판적 정책리터러시($r = .446, p < .001$), 정책지지($r = .372, p < .001$), 정책참여의도($r = .429, p < .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와 기능적 정책리터러시($r = .677, p < .001$), 비판적 정책리터러시($r = .354, p < .001$), 정책지지($r = .340, p < .001$), 정책참여의도($r = .387, p < .001$) 등 사이에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기능적 정책리터러시는 비판적 정책리터러시($r = .520, p < .001$), 정책지지($r = .366, p < .001$), 정책참여의도($r = .498, p < .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r = .727, p < .001$) 및 정책참여의도($r = .677,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의도 사이에는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760, p < .001$). 다중공선성 문제의 진단과 관련하여 배병렬(2002)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절댓값이 .80이상으로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r = .760$ 으로 기준치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인	측정문항	Estimate	Std. Estimate	SE	p	AVE	CR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1	1.000	.800			.667	.909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2	1.008	.821	.062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3	1.147	.857	.066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4	1.177	.820	.072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5	1.132	.784	.074	***		
지각된 정책효능감	지각된 정책효능감1	1.000	.891			.878	.966
	지각된 정책효능감2	1.077	.947	.038	***		
	지각된 정책효능감3	1.122	.965	.037	***		
	지각된 정책효능감4	1.104	.944	.039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1	1.000	.855			.851	.958
	전통적 정책리터러시2	1.092	.934	.045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3	1.114	.957	.044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4	1.097	.932	.045	***		

측정변인	측정문항	Estimate	Std. Estimate	SE	p	AVE	CR
가능적 정책리터러시	가능적 정책리터러시1	1.000	.900			.864	.962
	가능적 정책리터러시2	1.007	.926	.037	***		
	가능적 정책리터러시3	1.051	.946	.036	***		
	가능적 정책리터러시4	1.052	.946	.036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비판적 정책리터러시1	1.000	.820			.734	.917
	비판적 정책리터러시2	1.216	.910	.061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3	1.213	.867	.065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4	1.142	.827	.066	***		
정책지지	정책지지1	1.000	.863			.861	.969
	정책지지2	1.081	.933	.043	***		
	정책지지3	1.199	.969	.044	***		
	정책지지4	1.134	.942	.044	***		
	정책지지5	1.136	.930	.046	***		
정책참여의도	정책참여의도1	1.000	.958			.837	.953
	정책참여의도2	.982	.945	.026	***		
	정책참여의도3	1.045	.932	.030	***		
	정책참여의도4	1.006	.818	.044	***		

측정모형 적합도: CMIN/d.f. = 2,590, RMSEA = .071, NFI = .918, IFI = .948, TLI = .941, CFI = .948

주. N = 320, *** p < .001.

표 4.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1.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2. 지각된 정책효능감	.301***	—					
3.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261***	.574***	—				
4. 가능적 정책리터러시	.280***	.478***	.677***	—			
5.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501***	.446***	.354***	.520***	—		
6. 정책지지	.613***	.372***	.340***	.366***	.727***	—	
7. 정책참여의도	.650***	.429***	.387***	.498***	.677***	.760***	—
M	5.62	5.05	4.56	3.96	5.10	5.64	5.22
SD	.96	1.36	1.34	1.33	1.14	1.11	1.08
AVE	.667	.878	.851	.864	.734	.861	.837

주. N = 320, *** p < .001

4)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인 정책리터러시는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의 차원을 포함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각 차원별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활용했다. 이러한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추출 표본 크기는 5000개로 설정하고 95%의 신뢰구간(95% CI: 95% confidence interval)을 이용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본 분석을 수행하기 전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했는데,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MIN/d.f. = 3.092$, $RMSEA = .081$, $NFI = .901$, $IFI = .931$, $TLI = .923$, $CFI = .930$ 으로 구조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6, p < .001$). 응답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01, p > .05$)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3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은 전통적 정책리터러시($\beta = .109, p > .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능적 정책리터러시($\beta = .167, p < .05$)와 비판적 정책리터러시($\beta = .408, p < .001$)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이 높을수록 탄소중립정책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정책의 유용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한편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전통적($\beta = .550, p < .001$), 기능적($\beta = .440, p < .01$), 비판적($\beta = .330, p < .001$) 등 정책리터러시의 모든 차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탄소중립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을수록 탄소중립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정책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책의 효과나 영향력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각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통적 정책리터러시($\beta = .106, p > .05$)와 기능적 정책

리터러시($\beta = -.070, p > .05$)는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판적 정책리터러시($\beta = .561, p < .001$)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탄소중립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지지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탄소중립 정책지지는 탄소중립 정책참여의도에 높은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771, p < .001$), 연구가설 6은 역시 채택되었다. 이들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그림 2>에서 요약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의 경로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012로, Boot 95%CI = [-.001, .051]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의 경로에서도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012로, Boot 95%CI = [-.057, .004]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의 경로에서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229로, Boot 95%CI = [.170, .4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가설 1에서 검증된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이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 있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7은 부분 채택되었다.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정책효능감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의 경로에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058로, Boot 95%CI = [-.003, .104]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각된 정책효능감 →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의 경로에서도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031로, Boot 95%CI = [-.072, .015]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지각된 정책효능감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의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는데,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 .185로, Boot 95%CI = [.089, .23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가설 2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간의 관계에 있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8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5. 구조모형 경로효과

효과	경로	β	SE	Boot 95%CI		p
				LL	UL	
직접 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정책지지	.326	.064	.195	.450	***
	지각된 정책효능감 → 정책지지	.001	.057	-.114	.109	n.s.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109	.059	-.005	.229	n.s.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167	.064	.042	.292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408	.062	.283	.528	***
	지각된 정책효능감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550	.055	.434	.649	***
	지각된 정책효능감 →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440	.057	.320	.544	**
	지각된 정책효능감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330	.066	.196	.456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106	.060	-.010	.228	n.s.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070	.060	-.193	.046	n.s.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561	.061	.438	.678	***
	정책지지 → 정책참여의도	.771	.031	.703	.827	***
간접 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012	.012	-.001	.051	n.s.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012	.014	-.057	.004	n.s.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229	.061	.170	.413	***
	지각된 정책효능감 →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058	.027	-.003	.104	n.s.
	지각된 정책효능감 → 기능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031	.022	-.072	.015	n.s.
	지각된 정책효능감 → 비판적 정책리터러시 → 정책지지	.185	.036	.089	.230	***

주. $N = 320$,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LL = 하한계; UL = 상한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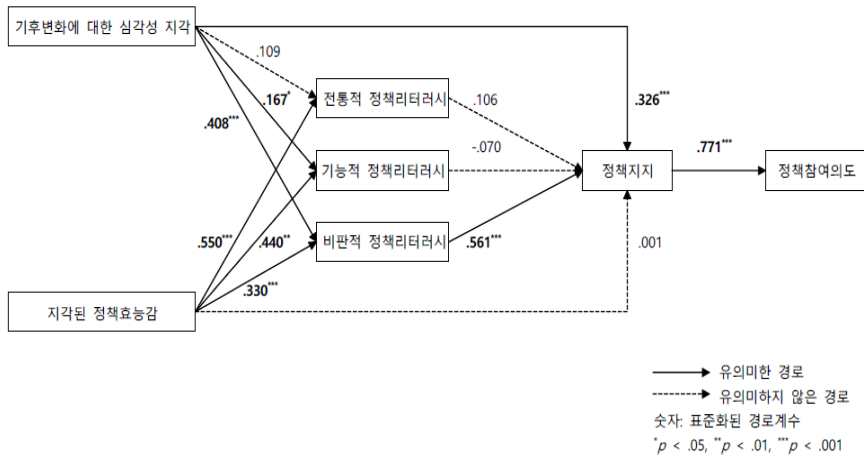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구조에서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 유형의 정책리터러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통해 1)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2)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3)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와 정책참여의도 간의 영향관계, 그리고 4)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의 관계에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 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와 이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이 탄소중립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는 유의미한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이 탄소중립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판적 정책리터러시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이나 우려는 탄소중립정책

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중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지각을 환기하고 문제의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성과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환경문제,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탄소중립정책의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유용성, 정책실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의 사회전반에 대한 기여를 소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인 정책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탄소중립정책 관련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 구성과 아울러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탄소저감 실천과 탄소중립정책 실행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국가차원에 미치는 바람직한 영향력에 대한 콘텐츠 구성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전통적·기능적·비판적 정책리터러시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영안·박미경·이홍재(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지각된 정책효능감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책리터러시로 이어지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탄소중립정책의 필요성,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느낄수록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전통적 정책리터러시)이 더 높게 나타났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정보 활용도(기능적 정책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능감이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유용성이나 기여도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평가(비판적 정책리터러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메시지 전략이나 콘텐츠 구성이라는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정책 실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적 정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정보 등을 일반 공중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공중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낮다고 느낀다든지, 정책정보 이해에 대한 자신감이 느낀다면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과 시각적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로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내용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바탕이 되면 정책 관련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은 물론 제공된 정책콘텐츠를 가정 및 직장 등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공중이 선호하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콘텐츠 채널이나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 변인 간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를 통해서만 정책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탄소중립정책 소통에 적용해보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울러 정책의 영향력이나 기대효과를 파악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정책의 환경적, 경제적, 삶의 질 차원의 기여 등에 대한 이해가 정책지지 확보에 필수적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인인식 차원의 변인인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모두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를 통해 정책지지로 연결되는 관계구조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의 성과나 기대효과, 영향력 등에 대한 소통이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의 기본적 단계로 생각된다.

넷째,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의 정책리터러시 중 비판적 정책리터러시만이 정책지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혜영·김주경(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탄소중립정책의 추진기관이 공중에게 단순히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내용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정책지지나 수용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 공중에게 탄소중립정책의 실행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변화,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 등의 평가적 영역에서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평가적 요소들을 콘텐츠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 공중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높아진 비판적 평가능력을 통해 폭넓은 정책지지와 적극적 정책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소통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탄소중립정책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탄소중립 실현 혹은 탄소저감의 실천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국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써 대국민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에너지데일리, 2022).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제고는 정책의 폭넓은 수용의 기본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지는 정책참여의도에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소중립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궁극적으로 일반 공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국가차원에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탄소중립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한 대응책으로 등장했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나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같이 탄소중립정책의 소통메시지 요소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변인을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와 연결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 소통메시지나 소통에 필요한 콘텐츠의 요소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폐해나 재해 등의 심각성과 효능감 인식은 비판적 리터러시를 통해 정책지지와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고 두 변인을 활용함과 아울러 정책의 영향력과 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소통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정책리터러시의 연구범주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리터러시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의 측면, 즉 전통적 정책리터러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오은비·이경아·이연택, 2016; 우지숙, 2009; 윤영석·윤지웅, 2018; 임도빈·정현정·강은영, 2012; 최연태·박상인, 2011).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뿐 아니라 기능적 및 비판적 정책리터러시의 개념을 함께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책리터러시의 매개적인 역할을 검증한 선행연구도 부족한 상황인데(김주경 외, 2020; 김현준·이일용, 2013; 이연택·김형준, 2014; 이연택·이경아·오은비, 2016), 이러한 연구들도 주로 전통적 정책리터러시 측면의 개념만을 적용해 검증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전통적·기능적·비판적 등 세 가지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320명 응답자 중 20~49세가 270명으로 표본의 80%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다른 연령그룹의 응답이나 반응이 저조하게 반영되었다. 향후 탄소중립정책 관련 조사는 표집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연령층의 응답자를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2021) 제1장 제5조에서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참여를 또한 호소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 산업·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지지 및 정책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후속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지각된 정책효능감과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는 모두 ‘정책에 대한 이해’에 관련한 개념이다. 지각된 정책효능감은 정책이해에 대한 자신감이나 제약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전통적 정책리터러시는 정책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각 개념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정책이해에 관련한 보다 세밀하고 차별적인 측정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책효능감과 정책리터러시의 수준을 묻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1년 미디어의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정책의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정책의 각 영역별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당위성이나 사회적 바람직함(social desirability)에 근거해 응답이 이루어졌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의 개별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공중의 정책효능감이나 정책리터러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은 본질적으로는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지역사회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기후변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후변화에 관련한 인식 변인과 정책리터러시,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참여 활동 등의 행동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귀영·윤영민 (2021). 정책 관련 내러티브가 공중의 SNS 상 정보 확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정책효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3(1), 140~186.
- 강형미·이유나 (2018). 국가안보 PR활동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리터러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2(6), 24~52.
- 고혜영·김주경 (2020). 정책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 97~1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UR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D%9B%84%EC%9C%84%EA%B8%B0%EB%8C%80%EC%9D%91%EC%9D%84%EC%9C%84%ED%95%9C%ED%83%84%EC%86%8C%EC%A4%91%EB%A6%BD%E3%86%8D%EB%85%B9%EC%83%89%EC%84%B1%EC%9E%A5%EA%B8%B0%EB%B3%B8%EB%B2%95>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기상청 기후변화포털 (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URL: http://www.climate.go.kr/home/cc_data/2020/Korean_Climate_Change_Assessment_Report_2020_1_summary.pdf
- 김수진·김영옥 (2019).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 정책 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 위험인식, 감정, 효능감의 매개 효과 중심 분석. *한국언론학보*, 63(4), 230~274.
- 김영옥·김혜정·한빛나라·함승경 (2020).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해석수준이 에너지 소비 관련공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후사회연구소 보고서*. URL: <http://rics.re.kr/archives/1664>
- 김재근·권기현 (2007).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6(4), 173~200.
- 김주경·김준홍·한문성·강제상 (2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123~152.
- 김주경·조광래·이홍재 (2015).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241~258.
- 김평·김서용 (2017). 인터넷상 원자력 에너지 반대행동의 결정요인 분석: 정책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3(3), 1~15.
- 김현준·이일용 (2013). 교육정책 정보제공이 교원의 이해를 매개하여 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31(2), 91~115.

- 박의진 (2022, 6월 9일). 한국의 탄소중립, 국격에 맞는 우선순위 두어야. *에너지투데이*, URL: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83>
-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경.
- 송해룡·김원제 (2013).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특성과 위험인식이 위험 심각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198~207.
- 신호창·이두원·조성은 (2011). *정책 PR*.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은비·이경아·이연택 (2016). 해외안전여행정책에 대한 정책PR, 공중관계성,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연구논총*, 28(3), 33~54.
- 외교부 (2020). *기후변화협상*. URL: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 우지숙 (2009). 커뮤니케이션이 정책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이용 및 토론 참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2), 313~335.
- 윤영석·윤지웅 (2018). 기후변화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 영향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44(3), 139~160.
- 윤종설·함중석 (2004).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URL: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15794>
- 이동기 (2021). 공간정보정책에 있어 정책리터러시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5(1), 35~56.
- 이연택·김태형·오은비 (2019). 지역축제정책의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관여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3(6), 117~134.
- 이연택·김형준 (2014). 관광경찰제도에 대한 정책PR, 정책이해, 정책지지 간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경영연구*, 18(2), 189~212.
- 이연택·이경아·오은비 (2016).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외안전여행정책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8(9), 63~82.
- 이영안·박미경·이홍재 (2019).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1), 23~52.
- 이영안·이홍재 (2018). 아동친화정책 PR 효과 요인의 구조적 관계 연구: A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1), 189~210.
- 이재완 (2019). 우리 국민들의 대외원조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정책 인지도와 정책 효능감을

-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3), 131~152.
- 임도빈·정현정·강은영 (2012).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거버넌스학회보*, 19(2), 1~29.
- 전호철·이홍림·김현노·안소은 (2021). KEI 포커스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URL: https://www.kei.re.kr/board.es?mid=a10102020000&bid=0028&act=view&list_no=57488&tag=&nPage=1
- 정광호 (2008).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73~104.
- 정윤지·하중식 (2015).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적응 인식 비교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6(2), 159~166.
- 주현정·이연택 (2015).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효능감과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7(4), 51~71.
- 차희원·여선하·박단아 (2018). 정책지지에 대한 정책PR 효과 검증: 대화형 정책소통 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9(3), 91~119.
- 최연태·박상인 (201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73~98.
- 한상운·정우현·마이랑 (202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URL: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348>
- 한신·이달희 (2019).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연구.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지*, 9(2), 161~171.
- 환경부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URL: https://www.gihoo.or.kr/netzero/download/NETZERO_FILE.pdf
- 2050 탄소중립 포털 (2022). *탄소중립은 무엇인가요?* URL: <https://www.gihoo.or.kr/netzero/intro/intro0101.do>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nderson, J.,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ampbell, A., Gurin, G.,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Ann Arbor, Mich.: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 Clayton, S., & Myers, G. (2015). *Conservation psychology: Understanding and promoting human care for nature*. Wiley-Blackwell.
- Craig, S. S., Niemi, R. G., & Silver, G.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i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eire, P., & Macedo, D. (2005).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Routledge.
- Heath, S. B. (1986). *The functions and uses of lite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 & Globetti, S.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253~27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ettle, N. P., & Dow, K. (2016). The role of perceived risk, uncertainty and trust of coast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Environment and Behavior, 48*(4), 579~60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ssen, D. D., & Serritzlew, S. (2011). Jurisdiction size and local democracy: Evidence 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from large-scale municipal refor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238~260.
- Marsh, H. W., & Hocevar, D. (1985). Applic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the study of self-concept: First- and higher-order factor models and their invariance across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97*(3), 562~582.

- Simon B., & Klandermans, B. (2001). Politicized collective identity: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56*, 319~331.
- Singh, A. S., Zwickle, A., Bruskotter, J. T., & Wilson, R. (2017). The perceived psychological dista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its influence on support for adaptation polic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73*, 93~99.
- Spence, A., Poortinga, W., & Pidgeon, N. (2012).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32*(6), 957~972.
- Wolbring, G., Leopatra, V., & Yumakulov, S. (2012). Information flow and health policy literacy: The role of the media. *Information*, *3*(3), 391~402.

논문투고일: 2022년 08월 27일

논문심사일: 2023년 0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1월 25일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Perceived Policy Efficacy on Carbon Neutrality Policy Support and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y Literacy

Zehao Liu*

Doctoral Student,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Young Cho**

Doctoral Student,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Mijeong Han***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perceived policy efficacy on carbon neutrality policy support and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 It also tested a mediating role of policy literacy(traditional, functional and critical) in these relationships.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policy support.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was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functional and critical policy literacy. Perceived policy 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ll three dimensions of policy literacy. The critical policy liter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policy support, and policy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with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 When testing for a mediating role of each policy literacy among perception variables and policy support, critical literacy showed partially mediating effects with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support in carbon neutrality. The critical policy literacy fully mediated the effect of perceived policy efficacy on policy suppor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important communication factors that can lead to public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the newly implemented complex carbon neutrality policy, including

* First Author, lzhzl0329@hanyang.ac.kr

** Co-Author, yzhao716@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mjhan909@hanyang.ac.k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In the future, these factor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mmunication on carbon neutrality policy.

KEY WORDS Carbon Neutrality Policy • Policy Literacy • Perceived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 Perceived Policy Efficacy • Policy Support and Policy Participation Intention